

한국 대학의 사회과학교육: 회고와 전망

임 희 석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머리말

대학교육은 자연과학과 인문학, 그리고 사회과학을 주된 교육내용으로 한다. 자연과학교육은 자연의 질서와 법칙에 관한 과학적 지식과 과학적 탐구방법을 전수하며, 인문학교육은 인간의 본성과 인간에 의해 창조되는 문화의 원리를 전수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사회과학 교육은 사회의 질서와 그 변동에 관한 과학적 지식과 그 연구방법론을 전수한다. 또한 대학에서의 자연과학, 인문학, 및 사회과학교육은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으로 나뉘어 이루어진다. 교양교육은 앞으로 각 분야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아갈 전문적 직업인들이 갖추어야 할 자연과 인간과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수하고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올바른 삶의 자세를 정립하도록 도와주는 교육과정이다. 그에 비해 전공교육은 대학생들이 졸업 후 수행하게 될 직업활동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전수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에서의 사회과학교육은 자연과학과 인문학교육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시대의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과학적 지식의 발달과 축적의 상태를 반영한다. 그러나 사회과학교육은 특히 특정한 역사적 시기의 시대상황과 시대정신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한국 대학에서의 사회과학교육도 물론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필자는 한세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대학에서의 사회과학교육을 대학의 사회적 기능을 중심으로 개관하고자 한다.

대학의 사회적 기능과 사회과학교육

우리 나라에서 근대적인 고등교육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한 것은 대한제국시대였다. 대한제국은 한반도에서의 식민지열강의 각축과 식민지화의 위협에 직면하여 전문기술관료 등의 새로운 인재 양성을 위해 사관학교, 의학교, 영어학교, 법관양성소 등과 같은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한 것이 근대적 고등교육기관의 효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일합방 이후 일제는 기존의 전문교육기관을 모두 폐교조치하고 1914년 '전문학교규칙'을 만들어 식민지배의 목적 아래 의학교, 법학전문학교, 고등공업학교, 고등농림학교, 고등상업학교, 광산전문학교, 고등수산학교 등과 같은 소수의 전문교육기관을 새로 설립하였다. 그러므로 1910년대까지의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에서는 법관양성을 위한 법학교육과 회계, 부기 등을 가르치는 상업교육 이외에는 사회과학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가 소수의 전문직업교육기관을 제한적으로 설립하고 대학의 설립은 허용하지 않는 식민지교육정책을 고수하는 데 대항하여, 1919년의 3·1독립운동 이후 한국인에 의한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자 일제는 하는 수 없이 민립대학 설립을 억제하기 위해 1924년에서야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였다. 그 결과로 경성제국대학에서는 경제학, 역사학 같은 순수 사회과학교육이 어느 정도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인에 의해 주도된 보성, 연희 등 몇몇 사립 전문학교들이 설립, 운영되고 있었으나, 일제 하에서의 사회과학교육은 대체로 법학과 상학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실무적인 전문지식을 교육하는 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해방후의 한국 대학은 하급관료나 하위 전문직 종사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했던 일제하의 식민지 고등교육의 틀을 벗어나, 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아갈 미래의 지도자, 즉 엘리트의 양성교육을 기본 목적으로 삼게 되었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사회과학교육도 정치학, 법학, 경제학, 행정학, 사회학, 교육학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면서 실용적인 전문직업교육뿐 아니라 순수학문으로서 사회과학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학문 자체의 발전보다는 정치인, 정부관료, 법조인 등과 같은 정치, 행정 분야의 엘리트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 커있었고, 사회과학분야의 학과 중에서도 정치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상학과(후에 경제학과와 경영학과로 바뀜) 등은 거의 모든 대학들에 설치되었고,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이른바 인기학과가 되기도 하였다.

1960년대 이후의 공업화 과정에서는 점차로 정치학, 행정학보다는 경제학(무역학 및 국제경제학 포함)과 경영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더 많아졌다. 그리하여 특히 경영학과는 최근에 이르도록 거의 모든 대학에 설치되어 가장 많은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대규모 학과로 성장하였다. 또한 1960년 이후 전통적인 대중매체였던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매체 특히 텔레비전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언론매체로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언론의 사회적 기능이 커짐에 따라 대학에서는 언론학과가 급속히 증가해 왔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언론학(초기에는 신문학)은 사회학과에서 맘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병칭의 몇몇 과목으로 교육되어 왔으나, 점차로 신문학과 또는 언론학과라는 별도의 학과로 독립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모체였던 사회학과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학과로 성장해 왔다. 한편 사회학, 심리학, 역사학, 인류학 등은 비교적 학생정원이 적은 학과로 남아 있으면서 사회과학 내의 기초학문으로서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을 수행해 오고 있다.

대학에서의 사회과학교육은 교양교육, 직업교육, 전공교육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사회과학의 모든 학문분과들은 대학의 1~2학년과정에서 개론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한두 과목의 교양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이어서 2~4학년 과정에서는 전공과목들이 개설되어 학생들은 자신이 소속한 학과에서 요구하는 40~60학점 정도의 전공과목을 이수한다. 그러나 모든 사회과학분야 학과의 졸업생들 가운데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자(교수)나 연구적으로 진출하는 학생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전공교육은 적어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도 직업교육의 성격을 갖게 된다. 학생들은 졸업 후의 취업을 위해 경영학과, 경제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등에서 개설하는 전공과목 중 취직시험에 필요한 과목들을 선택과목으로 수강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한국 대학에서의 경영학과, 경제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등은 가장 많은 학생정원을 가진 대규모 학과들일 뿐 아니라, 이들 학과에서 개설하는 일부 전공과목들은 인문사회계의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수강해야 하는 과목들로서 전공교육과 직업교육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3~4학년이 주로 수강하는 일부 전공과목들은 직업교육의 성격보다는 전공교육의 성격이 더 강한 과목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대학에서의 사회과학교육은 이처럼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여 해방후 '60년대까지는 정치학, 행정학, 법학을 중심으로 행정엘리트의 양성에 중점을 두어 오다 '60년대 이후에는 경영학과 경제학을 중심으로 기업의 경영엘리트의 양성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천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사실상 오늘날 행정관료의 대부분은 법학, 행정학, 및 정치학과 출신으로 충원되어 있으며, 경제관료들은 경제학과와 경영학과 출신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60년대 이후 한국의 대기업들은 주로 경영학과와 경제학과, 그리고 법학과와 행정학과 출신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왔으므로, 대기업의 간부들, 즉 경영엘리트의 대부분은 역시 이들 학과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한국의 대학교육은 '60년대 이전에는 주로 엘리트 양성이라는 교육목적을 수행해 왔으나 '60년대 이후에는 '대중교육'의 성격을 더 많이 지니게 된 것이 사실이다. 해방후 '60년대까지는 대학생의 수도 많지 않았고, 따라서 대학 졸업자들, 특히 이른바 일류대학 졸업자들은 졸업 후 곧바로 정부관료직이나 은행원, 회사원, 언론사 기자, 교사, 그밖에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으로 진출할 수 있었으며, 취업 후의 승진기회 등에서도 상당한 우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대학 졸업장은 엘리트가 되는 '성공에의 티켓'과 같은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의 대학입시 경쟁은 성공에의 티켓을 확보하려는 청소년들과 그 부모들의 치열한 전쟁과도 같았으며, 이른바 일류대학병이라는 것도 그와 같은 지위지향적 교육관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오늘날의 한국 대학교육은 엘리트교육적 성격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대학생의 양적 폭창과 엘리트 충원기회의 상대적 제한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대학 재학생들의 대학관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근래의 대학교육은 과거에 비해 '대중교육'의 성격과 '직업교육'의 성격을 더 많이 지니게 되었다. 대학생들은 이제 대학교육을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고 장래성이 있는 직업에 진

출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교육을 더 많이 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사회과학교육도 역시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등의 순수 기초사회과학 학과들은 학생정원을 상대적으로 줄여 나아가고 있으며, 법학, 행정학, 경영학 등과 같은 응용학문분야 학과의 정원은 늘려가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학부제와 복수전공제를 실시하는 등으로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의 폭을 넓혀 나아가고 있어, 대학에서의 사회과학교육은 더욱 더 대중교육과 직업교육의 성격을 강화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의 연구기능과 사회과학교육

대학은 교육기관이면서 동시에 연구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갖는다. 대학은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조적 지식'의 산실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늘날의 세계는 '지식기반사회'로의 문명사적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생산적인 정보와 창조적인 지식의 자원을 더 많이 갖는 나라가 새로운 세계질서 속의 강대국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적 지식의 생산력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의 연구기능은 어느 때보다도 더 강조해야 할 대학의 기능으로 부상되고 있다. 과거에는 몇몇 개인 학자들의 뛰어난 상상력에 의해서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었지만, 이제는 대학의 연구소나 학자들의 연구집단과 같은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집중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창출되지 않으면 충분한 경쟁력을 지니기 어렵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대학은 교육기능에 못지 않게 연구기능의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대학은 오랫동안 연구기능보다는 교육기능에 중점을 두어 왔다. 해방후의 한국대학들은 각 분야의 지도적인 인재, 즉 엘리트의 양

성을 목적으로 했건 아니면 각 분야의 전문직업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했건간에 학생들에게는 기본적인 교양지식과 전공지식을 전수하는 것에 대체로 그 역할을 한정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 대학에서의 연구기능은 기본적으로 교수들의 개인적인 연구활동에 맡기고, 대학의 모든 행정은 교육기능의 수행에 집중해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에 이르도록 한국의 모든 대학은 학부 중심대학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대학 4년과정의 학부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대학원교육은 그에 부수되는 2차적인 교육활동으로 취급해 온 것이다. 또한 대학 교수들은 과중한 학부교육과 대학원교육의 부담 속에서 연구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도 제약을 받았을 뿐 아니라, 연구비 제약으로 연구다운 연구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한국의 대학교수들도 역시 연구보다는 주로 교육의 기능에 중점을 두어 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자연과학계의 교수들이나 인문사회과학계 교수들이나 크게 다름이 없었다. 다만 '80년대 이후 공학계를 중심으로 자연과학계 교수들은 정부와 기업들의 연구비 투입으로 연구여건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비해서 사회과학분야의 연구여건은 아직도 매우 후진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과학계의 교수들은 주로 개인적인 연구활동이나 해외유학 및 연구 등을 통해 최소한의 연구실적을 내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한국 대학의 열악한 연구여건은 한국 사회과학의 후진성과 해외의 존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의 사회과학은 해방후부터 '60년대까지는 주로 선진국의 학문을 도입하는 데 열중해 왔고 '70년대 이후에는 한국 사회의 분석을 위해 서구이론과 방법론을 적용해서 연구하는 시도가 있어 왔지만, 한국의 사회과학이 세계의 사회과학계에 독창적인 연구성과나 이론을 제시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학문적 후진성과 선진국 의존성을 그대로 두고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연구력과 국가경쟁력에서 선진국과 경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의 교육과 연구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대학에서의 교육은 교수들의 연구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들의 연구 여건과 연구실적이 좋을수록 교수들의 교육내용도 더욱 충실히 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 특히 대학원 학생들이 교수들의 연구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교육과 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만, 학생들의 교육도 단순한 지식의 전수가 아닌 연구능력의 전수로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에서의 사회과학교육도 이제는 연구와 교육이 이원화되어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벗어나 교수와 학생이 함께 연구하고 새로운 지식을 함께 창조해 나아가는 연구중심의 교육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과학교육의 현실적합성 문제

한국 대학에서의 사회과학 연구기능의 저조와 그 결과로서 한국 사회과학의 후진성 및 서구 사회과학에의 높은 의존도는 자연히 한국 사회과학 교육의 현실적합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즉, 한국의 사회과학이 한국 사회의 현실을, 더 나가서는 세계적인 사회적 현실을 충실히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입장에서 정확하고 바르게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 왔는가 하는 의문과 자기반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는 권위주의 정부하의 한국의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이 계속되어 왔으며, 또한 '60년대 이후의 공업화 과정에서는 한국의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빈민운동, 통일운동 등과 연계된 대학생들의 학생운동이 급진성과 과격성을 더해가고 있을 때에 한국의 사회과학과 대학에서의 사회과학교육은 학생

들에게 명확한 현실진단과 한국 사회의 나아갈 길에 대한 처방을 제시하는 데 적지 않은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이론과 운동권 학생들의 '사회과학' 연구는 정규의 사회과학 교과과정과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대부분 교수들의 사회과학 강의는 '보수적인' 혹은 '반동적인' '강단 사회과학'으로 폐척하기도 하였다.

'90년대에 들어와서도 한국의 사회과학은 김영삼정부가 '세계화'를 구호로 내세우면서 OECD에 가입을 서둘렀을 때에도, '세계화'의 사회과학적 논의와 분석에서 대체로 선진국의 논리를 추종하였을 뿐 한국의 시각에서의 세계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양식을 제시하는 데는 실패했으며 그 결과로 외환위기와 경제위기를 미리 진단하고 예방하는 데에도 실패했다는 사회과학자들의 뼈아픈 자기반성을 불러 오기도 하였다.

한국의 사회과학과 사회과학교육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념지향과 무관할 수가 없다. 과학으로서의 사회과학이 가치중립성을 표방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적어도 사회과학자들의 지식관심과 문제의식은 가치중립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해방후 한국의 사회과학 연구와 사회과학교육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정치이념과 시장원리를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라는 한국 사회의 중심 이데올로기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져 왔다. 또한 한국의 사회과학교육은 해방에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냉전질서 속에서 마르크스주의적 전통의 사회과학은 철저하게 배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공업화 과정에서의 빈부격차의 심화와 노사갈등의 심화 등은 점차로 한국 사회과학에서도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이나 진보적인 사회과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문호를 개방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사회과학교육에서는 대체로 마르크스주의 사회과학과 급진적 사회과학에 대해서는 폐쇄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상황이 한때 대학에서 사회과학교육의 현실적합성에 대한 일부 학생들의 비판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한국의 사회과학과 사회과학교육이 지난 '현실비적합성'의 문제는 결국 한국 사회과학의 후진성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사회과학은 아직도 선진국의 사회과학을 수입해서 가공하는 수준에서 빌로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독자적이고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연구성과의 축적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 사회과학을 정립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서구학문의 수입과 모방에만 머무르던 일본의 사회과학이 근래에 이르러 나름대로 일본사회의 시각에서의 사회과학적 연구성과들을 축적하려고 애쓰고 있는 점을 한국의 사회과학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물론 한국 사회과학의 정체성과 창조성의 확보라는 과제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정부를 비롯한 여러 민간재단들에 의한 꾸준한 연구비 지원이 계속되어 대학에서의 사회과학 연구의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만 가능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한국 대학에서의 사회과학 연구여건의 열악한 조건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과학자의 교육과 양성을 미국을 비롯한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의 대학과 대학원에 의존하게 하였다. 오늘날 한국 대학에서의 사회과학분야 교수들의 대부분은 선진국의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다. 한국의 사회과학자들이 선진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국의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회과학자들이 언제까지 외국박사보다 교수충원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서 경쟁해야 하는 현실을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 하루 속히 한국 대학원 교육의 질과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대학에서의 연구여건을 개선하여, 한국에서 교육받은 사회과학자들이 선진국의 대학원에서 교육받은 사회과학자들에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도록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맺는 말

최근 교육부에서는 대학의 연구력 제고를 위해 적지 않은 정부재정을 투입하여 BK21사업에 착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자연과학계, 그 중에서도 공학분야의 연구지원에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인문사회계에는 매우 제한된 지원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력 제고뿐 아니라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연구력 강화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한정된 정부 재정을 가지고 모든 분야와 모든 대학의 연구력 강화를 위해 동시에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에, BK21사업이 출발단계에서 공학분야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교육부의 연구지원사업이 인문사회계에도 확대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국 대학에서 사회과학 교육의 여러 문제점들은 궁극적으로 대학에서의 사회과학 연구의 후진성, 즉 연구기능에서의 선진국과의 현저한 격차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의 대학은 학부교육에서는 교양교육과 직업 교육에 비중을 두고, 고도로 전문화된 전문교육과 연구

기능은 대학원에서 담당해 나아가는 체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 또 그와 같은 방향으로 한국의 대학들이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학부교육이든, 대학원교육이든 한국 대학에서의 사회과학교육이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창조적 지식인과 전문인을 효과적으로 양성, 배출해 내고 현실적 합성이 높은 교육내용을 학생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대학에서의 사회과학 연구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학에서의 교육과 연구 기능은 서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높은 상호의존성을 갖기 때문이다. ■■■

임희섭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Emory 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웨스트 조지아대학 조교수, 한국사회학회장,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학술원 회원이며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한국의 사회변동과 문화변동」, 「사회적 평등과 발전」,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이론」 등이 있다.